광주시,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14년 만의 쾌거"

미래차·인공지능 양 날개로 미래산업 전환 추진

강기정 시장 "광주를 제1의 미래차도시로 만들 것"

광주시가 미래차 국가산단 신규 유치에 성공했다. 광주시는 15일 국토교통부의 신규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에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09년 9월 빛그린국가산단 지정 이후 14년 만에 신규 국가산단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미래차 국가산단은 빛그린국가산단 인근에 100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이 곳에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배터리 등 미래차산업을 집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전용산단인 빛그린국가산단은 분양률이 91%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미래차 인프라 구축과 집적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국가산단 조성 기간이 통상 10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국가산단 유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신규 국가산단 공모에 참여, 19개 지자체와 서면평가·현장실사·종합평가·최종심의 등 치열한 경쟁을 펼쳐 신규 국가산단 유치에 성공했다.

강기정 시장은 현장실사에서 직접 브리핑하는 등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의 당위성과 절실함을 설득했다. 조환익 위원장 등 모빌리티산업혁신추진위원과 지역 국회의원·시의원 등 정치권의 헌신적인 활동, 광주시민의 열망이 신규 국가산단 유치에 큰 힘이 됐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연 72만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국내 제2의 자동차 생산도시다. 자동차산업이 지역 제조업 매출액의 43.1%를 차지하고, 관련 종사자도 2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자동차산업은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자율주행차로의 변화 때문이다.

광주시는 우선 미래차 국가산단을 최대한 신속하게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차산업 수요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조처다.

광주시는 미래차 국가산단과 기존 산단인 빛그린국가산단·진곡산단과 연계, 완벽한 미래차 산업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등 미래차 관련 기업과 인프라가 집적화된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부품기업들이 미래차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개수는 내연기관차의 절반 수준에 불과, 영세한 지역 부품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역 부품기업들의 사업 재편과 전환을 지원하고 금융지원·맞춤형 컨설팅·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역량강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인공지능 기반 센서기술을 고도화하고, 미래차 부품인증센터를 구축한다. 초연결 모빌리티 서비스산업 육성·자율주행 순환도로 구축 등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미래차 기술개발지원센터와 디지털 기반 상용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미래차 선도도시가 지금 우리에게는 꿈이자 위기일지라도 다가올 미래를 단단히 준비한다면 내일의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래차 국가산단을 최대한 신속히 조성해 산업기반을 확장하는 한편 도심 곳곳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융합한 자율주행,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대한민국 제1의 미래차산업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달 말 미래차 비전 선포식을 열고 산업인프라 확대, 지역 부품기업 역량 강화,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 등 미래차 선도도시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다. 다음 달 모빌리티산업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조환익)를 통해 산·학·연·관 종합적 의견을 수렴,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재환 기자

'미래차 산단 유치' 기아차 광주공장 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탄력받나?

내연기관 중심서 친환경 전기차 생산설비 구축 필요성 공감대

기아 오토랜드 광주 조형물. (사진 = 기아 오토랜드 광주 제공)

광주시가 미래차 국가산단을 유치함에 따라 미래차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기아차 광주공장의 이전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다.

1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신규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에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포함됐다.

미래차 국가산단은 광주 광산구 삼거동·덕림동과 함평군 월야면 일원 407만㎡ 부지에 조성된 빛그린산단 인근 330만㎡(100만평) 이상 규모로 지어지는 신규 산단으로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배터리 등 미래차산업을 집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연 72만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국내 제2의 자동차 생산도시다. 자동차산업이 지역 제조업 매출액의 43.1%를 차지하고 관련 종사자도 2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기아차 광주공장은 1998년 완공된 지 24년이 지나면서 설비가 노후화된데다 내연기관차 중심 생산 설비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새로운 공장에서 친환경 전기차 생산 설비를 구축해야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미래차 산단 유치를 위해 광주시가 연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포럼'과 같은해 11월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이 광주시의회에서 개최한 `광주 미래도시와 미래차 산업' 정책토론회에 따르면 기아차 광주공장은 도심 중심에 위치해 교통체증으로 부품기업 접근성이 낮아 원활한 부품 수급 및 적재 공간 확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화물연대 노조 파업 시 적기 부품 수급 및 효율적인 조립라인 기능 상실로 부품 수급 직격탄을 맞거나 완성차 생간 및 탁송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인구 밀접 지역으로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광주에서 두 번째로 많이 부과한 지역에 속한다.

광주테크노파크 정주영 책임은 정책토론회에서 "미래차 전환 실패로 광주 최대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이 붕괴할 경우 지역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면서 "신규 산단 조성을 통해 기아 광주공장 및 주요 협력사를 이전해 광주 자동차산업의 집적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재봉 광주자동차산업 산학연협의회장은 포럼에서 "기아와 협력 기업을 한데 모아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클러스터링 실현으로 중간재고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적시생산방식(JIT)강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기아차 광주공장의 이전설이 종종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노후화된 광주공장의 새로운 변화 필요성과 함께,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데다, 이번 국가산단 조성이 확정됨에 따라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

미래 산단을 유치한 광주시의 의지도 강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미래차 선도도시가 지금 우리에게는 꿈이자 위기일지라도 다가올 미래를 단단히 준비한다면 내일의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래차 국가산단을 최대한 신속히 조성해 산업기반을 확장하는 한편 도심 곳곳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융합한 자율주행,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대한민국 제1의 미래차산업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기아차 결정만 남은 상태다.

아직 아무런 반응은 없지만,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슬비 기자

광주 북구청 공직자 55%

"노동 강도 세다"

노조, 전 공직자 1010명 대상 설문

과도한 신규 사업 발굴 등 업무 과중을 공론화한 광주 북구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노동 강도가 세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북구지부(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구청 직원 1010명(본청 633명, 동·사업소 377명)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업무·복지·조직 문화 전반에 걸쳐 설문 조사를 벌였다.

설문 조사 분석 결과 노동 강도를 묻는 문항에 '세다' 43%, '매우 세다' 12%를 더해 55%가 업무 부담이 무겁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답은 44%, '약하다' 응답은 1%에 불과했다.

근무 만족도에 대해서는 응답 공직자의 42%(426명)가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답은 40%(407명)이었다. 반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은 18%(177명)에 그쳤다.

설문 응답 공직자 중 41%는 '과다한 업무나 민원'이 가장 힘들다고 응답했다. 이어 의회와의 관계 23%, 공모 사업 18%, 동료와의 관계 12% 순으로 고충을 느낀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잦은 초과근무', '갑질 민원 처리'가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공모사업 관련 업무 고충으로는 응답 직원의 35%가 작성 과정이 어렵다고 답했다. 선정 과정 역시 34%, 진행·결과 업무에 있어서도 28%가 상당한 부담을 토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료와의 관계(내부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관련 문항 응답 직원 304명 중 31%가 '과도하고 경직된 근무 분위기 조성'을 문제로 꼽았다. '인격모독적이고 권위적인 발언·태도', '불화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응답도 각기 20%나 됐다. '무리한 업무 지시 또는 부당한 결재 거부'를 선택한 경우도 18%에 달했다.

구청 내 휴직자 증가 이유로는 응답자의 73%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꼽았다. '질병 치유·가족 돌봄·자기 개발' 등 개인적 사유도 15%였다.

'의회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의회의 고압적인 태도 등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상당수였다.

응답 문항 별로는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46% ▲인격모독적이고 권위적인 발언·태도 21% ▲처리 불가 민원 반복 요구 16% ▲각종 이권개입 12% ▲기타 5%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원들의 구정 관련 각종 이권개입에 대한 문제 의식이 눈에 띄었다.

서선옥 기자